



기여입학제 아직은 이르다



정인학
대한매일 논설위원

기여입학제 논란이 한창이다. 연세대가 불을 당겼다. 당장 내년도 입시에 서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외부에는 '학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인사의 후손들은 특별 전형하는 방법으로 입시에서 우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기부금을 받고 입학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었다. 20억 원을 받고 정원의 2%, 80명을 특례 입학시킨다는 것이다. '99년도의 예산이 3,373억 원이었으나 절반이 훨씬 넘는 돈을 편법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세대 기여입학제의 윤곽이 드러나자 말도 안 된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앞으로 '기여입학제'에 이어 '기여졸업제', 돈 내고 취업하는 '기여입사제' 그리고 돈을 주고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기여병역면제제'까지 도입할 것이냐는 빈축이 꼬리를 물었다. 또 '100억 원이면 확실하겠지요'라고 운을 뗀 뒤 지원자가 몰리면 합격증을 경쟁입찰 할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기여입학제 논란의 가닥을 제대로 잡아 보기 위해 논의과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처음 화두로 던져진 것은 '86년이었다. 당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사학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여입학제를 처음 검토했다. 6공화국이 들어서며 노태우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잔잔하게 논의가 진행되다가 '91년에는 한 차례의 토론회와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갖기도 했다. 그 해 국정 감사에서 교육부가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게 전기가 되어 본격적인 정책 연구가 시작됐지만 '92, '93년 서울의 몇몇 사립대에서 입시 부정 사건이 터지며 논의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사장된 듯한 기여입학제를 다시 끄집어 낸 것은 고려대가 먼저였다. '97년 당시 홍일식 총장은 사립대학 총장 협의회에서 사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원 외로 1~2%를 특별 입학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자지들었다. 오히려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다른 사립대학들의 음높이가 특히 두드러졌었다.

논의가 15년이나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립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의 77%나 차지하고 있는 사학들이 인프라

“

결혼부터 말하면 돈을 내고 대학에 입학하는

기여입학제는 전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대학에서 강의권을 받을 수 있는 수학능력을 갖쳤느냐를 잣대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도 건전한 기부 문화는 정착되어 있다.

”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학생 1인당 평균 40.5권이다. 일본의 도쿄대 296권, 영국의 옥스포드대 593권에 비해 턱없이 적다. 장서 규모가 바로 경쟁력 지표는 아니지만 중요한 판단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사립대학의 연간 예산을 살펴보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70% 안팎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다. 이 같은 의존도는 미국 사립대의 40~45%, 영국 대학들의 20~25% 보다 엄청나게 높은 것이다. 외부의 기부금이나 지원이 미미하다는 얘기다. 외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인건비와 학교 유지비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따로 쓸 돈이 없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국고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않다. 대학 예산 중 국고 지원금 비중이 3.31%로 역시 선진 외국보다 크게 낮다. 일본의 14%, 미국의 18%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대학에 지원을 강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올해의 경우 교육 예산은 전체의 24%에 육박해 다른 부분과 형편성이나 우선 순위를 고려한다면 더이상 늘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혜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등록금을 무작정 인상할 수도 없는 것도 우리 실정이다. 지금의 경제 수준에서 더 이상의 등록금 인상은 객관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저항이 따를 것이

고 정부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기여입학제라도 도입해 재원을 늘려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호소력을 가지는 대목이다. 학교 시설과 실험 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고 교수들의 연구 지원비를 지원하거나 장학금을 크게 늘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힌다면 사회정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명분 속에 감춰진 가시는 날카롭고 뾰족하다. 당장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천명하는 실정법을 어기게 된다. 교육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은 제쳐 두고라도 헌법은 '능력'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능력'은 학생의 학습 능력이지 부모의 재정 능력이 결코 아니다. 실제로 법원은 외교관인 부모때문에 연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어 특례 입학시킨 사례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하고 있다.

물질 만능주의로 우려되는 가치관의 전도는 치명적이다.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과외비는 차치하더라도 밤을 지새워 공부해 일정 수준의 실력을 쌓아야 일원이 되는 게 대학이다. 사회화 과정의 다른 모습인 학습 과정을 뛰어넘어 그것도 부모의 돈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면 금전 가치를 학습 능력과 동일시하는 결과를 빚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릴 것이다. 능력주의 틀이 무력화되면서 사회적 가치

관이 혼란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중·고교에서 대학까지 학생들의 지적수준 하향 평준화에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올해 서울대의 자연대와 공대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7.7%가 수학(數學) 기초 능력 자체 평가에서 '수강불능' 판정을 받았다. 또 전체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평가에서는 무려 50%가 역시 낙제점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신입생을 선발한 시험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큰 공감을 얻지 못했다. '대학 교양 국어'를 수강한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韓國'을 읽지 못한 학생도 있었고 보면 실력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여입학제가 학생들 지적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부채질하지 않을까 적이 우려된다.

예견되는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돈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절대 안 될 대목이다. '60년대 이후 실적 위주로 추진된 공업화는 경제적 부(富)와 함께 결과 제일주의라는 독소도 함께 가져왔음을 익히 알고 있다. 가시적인 결과가 있으면 부정 부패도 어느 정도는 용인해 온 병폐가 지금은 족쇄가 되어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고질적인 부패 고리는 경제의 세계화를 막고 있고 공부만 잘하면 아무래도 좋다는 발상은 교실 붕괴를 가져왔다.

경제력으로 인격까지 재단하는 물질만능주의는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사회 건전성을 파괴하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는 전대미문의 '도덕성 공백' 현상이 생활의 일부처럼 되었다. 집단간, 계층간 이기주의가 보편화되면서 이른바 '왕따 풍토'가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로마가 결코 국력이 약해서 멸망하지는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도덕성으로 요약되는 사회의 바른 가치 체계를 동요시킬 수도 있는 기여입학제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

여 비교육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학 신입생 선발의 공정성을 교육 체제의 토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여입학은 대학의 불신 나아가 교육 체제의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재산 상태에 따른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 또한 곱씹어 보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연세대의 비물재적(非物材的) 특례입학도 문제다. 당초 백낙준 초대 총장이나 최현배 선생들을 예시했던 것과는 달리 전현직 총장에 역대 이사장 여기에 총동문회장까지 포함시켰다.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자리'들이 곧 합격증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보면 일부 특권층과 부유층 자녀들은 공부하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대학의 제정 확충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고 미미할 것이라는 현실도 반대의 메아리에 더해지고 있다. 기여입학을 허용해도 이른바 일류 사립대학 인기 학과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자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하위권 대학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면서 '얼마짜리'라는 식으로 대학의 서열화 현상이 심화돼 또다른 문제만 낳는다는 것이다.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여입학제를 반대하고 나서는 까닭이 쉽게 이해되는 대목이다.

기여입학제 논란을 정리하는 데 외국의 사례가 도움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내고 대학에 입학하는 기여입학제는 전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대학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수학능력을 갖췄느냐를 잣대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도 건전한 기부 문화는 정착되어 있다. 몇 년 후 자신들의 입학을 염두에 두고 대학에 도서관이나 강의실을 지어 주거나 금품을 기증하는 게 아니다. 대학을 통한 학문의 발전이 나라 나아가 인류 문명에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

“

사회에 건전한 '나눔의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야 한다.
 학벌과 특권을 대물림시키겠다는 계산이 아니라
 건전하고 맑은 사회 기풍 정착에 기여해 자손들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토양을 가꾸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에 애써 번 돈을 조건없이 기증한다.

미국의 '나눔의 문화'는 귀감이 된다. 철강왕 카네기는 엄청나게 번 돈으로 미국에 2,000개의 도서관을 지었다고 한다. 석유 재벌의 원조격인 록펠러가 세운 록펠레 재단은 1만 명을 공부시켰고 노벨상 수상자가 자그마치 60명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대학들 연간 예산액의 15% 가까이가 기부금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들도 이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도서관이나 건물 혹은 연구 재단 등의 이름을 기증자 이름으로 대신한다. 존스 홉킨스나 스탠퍼드, 코넬 대학 등은 학교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했다. 그리고 선조들이 맑고 곧은 마음가짐으로 가꿔 온 대학에 후손들이 지원하면 전형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참작을 해주는 게 고작이다. 일정 수준의 성적은 물론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상황까지 전형 기준에 맞아야 함은 물론이다.

미국 이외에 대학에서 기부금 관행이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에서 이미 입시에 합격한 입학생의 부모가 내는 기부금을 묵시적

으로 받고 있다. 워낙 비싼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입시 전형을 통과한 합격생만이 기부금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입학제는 결코 아니다.

사회에 건전한 '나눔의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야 한다. 자손의 입학할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학을 발전시켜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나아가 인류 문명에 이바지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벌과 특권을 대물림시키겠다는 계산이 아니라 건전하고 맑은 사회 기풍 정착에 기여해 자손들이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토양을 가꾸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여입학제를 논의해야 한다. 기여입학제 아직은 이르다. **한**

정인학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신문 기자, 스포츠서울 사회부장, 대한매일 국제·전국팀장·편집국 부국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한매일 논설위원으로 재직중이다.